

제일경제

05월 22일 010면

국토통합 정보시스템 2011년까지 구축

토지 용도별 행위제한 내용과 사유, 이용시 필요한 법적 절차 등 국토이용 정보를 온라인·웹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토통합 정보시스템이 2011년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 81개 법률에서 273개 용도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국토 정보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는 방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통합 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 10개 시스템으로 개별 운영하고 있는 국토 정보를 하나로 묶어 토지용도별 행위제한 내용 및 사유, 이용시 필요한 법률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양한 토지 정보를 온라인에서 일괄 제공,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국토 정책 및 개발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지속가능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토정보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일반인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여러 부처의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